

능동적 복지와 도서관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국·내외 귀빈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날 “선진화의 길, 다함께 열어갑시다” 라는 제목의 취임사를 통해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풍요와 배려 그리고 품격이 넘치는 나라를 향한 장엄한 출발을 선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는 국내·외 여러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언급되었지만 특히 경제성장과 발전에 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소신이 강력하게 피력되었는데 이는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열망이고 정권교체의 당위적 명분이기도 했던 핵심적 키워드가 경제성장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도서관인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또 다른 비전인 분배와 복지에 관한 대통령의 정책과 소신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취임사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점으로 이는 분배와 복지가 도서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복지정책에 관련해 시혜적·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며 능동적·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낙오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질적으로 확대하는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했다.

여기서 능동적·예방적 복지란 모든 국민들이 생산적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에서부터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이르기까지 비생산적 복지정책

을 개선하여 재투자적·재창조적 생산활동의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정책과 패러다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능동적·예방적 복지를 주창한 까닭은 과도한 시혜적·사후적 복지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시키며 나아가서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국가 예산의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며 비생산적 사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현상은 분배와 복지를 우선시한 선진국의 복지국가 위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분배와 복지를 강조한 지난 참여정부에서 사회 간접자본의 예산을 줄여가면서 복지 지출 비중을 늘렸음에도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극빈층이 늘어나는 경제 양극화 현상이 가속되어 왔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비판론자들은 성장과 분배 모두를 잃어버리는 정책실패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실패했다면 그 대부분은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서 지적한 시혜적, 사후적 복지정책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대책은 복지정책 중 우선 순위에 있는 정책이었고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백화점 식으로 나열된 실업 복지대책은 실업자에 대한 시혜적, 사후적 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곤 했다.

이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는 단순히 실업에 따른 보상적, 시혜적 복지혜택 수준에



이 상 복
협회출판위원장
sblee@daejin.ac.kr

서 벗어나 실업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교육과 훈련, 고용창출, 일자리나 구직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조, 자구노력을 고취시키는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과 극빈자, 노약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시급히 정착시켜야 할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정책 패러다임과 슬로건은 나름대로 타당성과 설득력이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동적이고 예방적일 수 있는 사회복지 인프라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하나가 다른 어느 기관 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뛰어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과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400여개관이 안된 전국 공공도서관 수는 2006년 후반에 와서 564개관으로 약 200여개관이 증가했으며 3천만권이 안되었던 도서관 자료수도 그 배가 되는 6천만권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공·사립문고 등 지역 주민의 생활권역별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식·정보의 균등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 데는 정치, 경제, 사회전반의 환경변화에도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복지 중시 정책의 영향으로써 공공도서관이 지식, 정보, 문화에 있어서 연령, 인종, 성별, 종교, 국적,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복지 시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새 정부가 펼칠 능동적·예방적 복지 정책이 공공도서관과 같은 문화복지 인프라 정책이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까닭은 작금의 사회적 병리현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보다는 보다 근원적으로 교육적·사회 복지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측면의 접근은 빈곤계층도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새 정부가 주창한 교육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적 접근은 실업자 및 빈곤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시키고 경제적 능력 또는 소득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및 사회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모두에 공공도서관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지식·정보 소외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은 도서관이 양극화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필수적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새 정부에서의 공공도서관 발전에 대한 우리 도서관인의 바람이 헛된 꿈이 아니길 기대하고 싶다. 